

제174호 (2008. 9. 29)

■ 경제 동향

-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7월 대비 30% 감소한 2만 7,233호
- 7월 전국 토지 거래량, 6월 대비 0.2% 소폭 증가

■ 정책·경영

-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 “9.19 부동산 대책을 분석한다”

■ 정보 마당

- 투자의 원칙-“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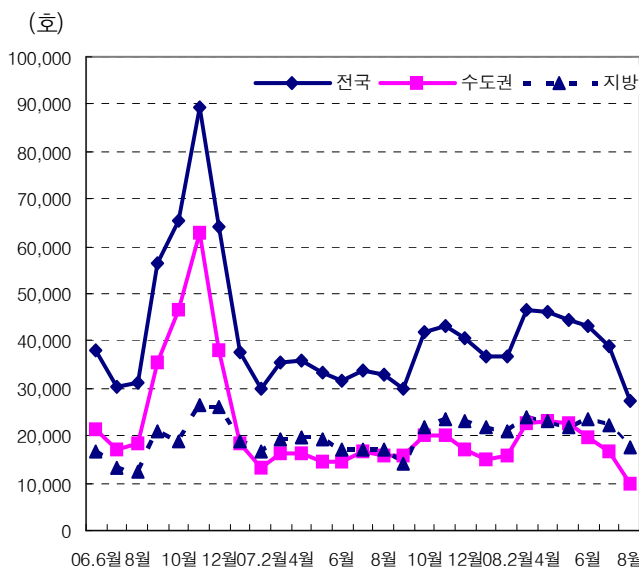
■ 건설 논단 : 3D 산업에 대한 역발상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7월 대비 30% 감소한 2만 7,233호

– 3월부터 지속적인 위축,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주택 구입 능력 감소에 기인 –

- 2008년 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은 2만 7,233호로 전월 대비 29.8%, 전년 동월 대비 17.1%가 감소함.
 - 수도권은 9,819호로 전월 대비 40.8%, 전년 동월 대비 37.9% 감소함.
 - 지방은 1만 7,414호로 전월 대비 21.6%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2.1%가 증가함.
 -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함.
- 2008년 3월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이 4만 6,629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2만 7,233호로 2008년 3월의 58.4%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최근의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 구입 능력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 : 호, %)

지역	2007. 8	2008. 7	2008. 8		
			거래량	전월비	동월비
전국	32,853	38,804	27,233	-29.8	-17.1
수도권	15,800	16,590	9,819	-40.8	-37.9
지방	17,053	22,214	17,414	-21.6	2.1
서울	4,346	4,159	2,441	-41.3	-43.8
강남 3구	502	505	323	-36.0	-35.7
강북 14구	2,370	1,736	1,008	-41.9	-57.5
5개신도시	1,030	1,230	720	-41.5	-30.1
6대광역시	9,966	11,303	8,557	-24.3	-14.1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7월 전국 토지 거래량, 6월 대비 0.2% 소폭 증가

- 도시 지역은 전월 대비 1.2% 감소, 비도시 지역 거래는 증가 -

- 2008년 7월 토지 거래량은 24만 4,827필지가 거래되었으며,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5.1%가 증가함.
 - 총 거래량의 74.5%가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시 지역 토지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가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1%가 증가함.
 - 관리 지역은 4만 5,437필지가 거래되었으며, 전월 대비 5.7%, 전년 동월 대비 20.1%가 증가함.
 - 농림 지역은 전월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함.
 -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전월 대비 18.6%,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함.
- 경제 침체 등으로 토지 거래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지 지역, 개발 여부에 따라 용도 변경이 예상되는 관리 지역 등의 거래가 증가한 특징을 보임.

용도 지역별 토지 거래량

(단위 : 필지, %)

구분	2007. 7월		2008. 6		2008. 7월			
	거래량	비중	거래량	비중	거래량	비중	전월비	동월비
전국	195,771	100.0	244,440	100.0	244,827	100.0	0.2	25.1
도시 지역	143,564	73.3	184,784	75.6	182,477	74.5	-1.2	27.1
주거 지역	107,427	54.9	133,202	54.5	134,377	54.9	0.9	25.1
상업 지역	14,679	7.5	20,326	8.3	19,708	8.0	-3.0	34.3
공업 지역	4,200	2.1	6,734	2.8	5,794	2.4	-14.0	38.0
녹지 지역	13,764	7.0	16,036	6.6	16,464	6.7	2.7	19.6
개발 제한	1,446	0.7	1,203	0.5	1,161	0.5	-3.5	-19.7
미지정	2,048	1.0	7,283	3.0	4,973	2.0	-31.7	142.8
관리 지역	37,818	19.3	43,007	17.6	45,437	18.6	5.7	20.1
농림 지역	12,951	6.6	15,044	6.2	15,009	6.1	-0.2	15.9
자연 환경 보전 지역	1,438	0.7	1,605	0.7	1,904	0.8	18.6	32.4

자료 : 한국토지공사.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기간인 2019년까지, 국가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이 바람직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예고(2008. 9. 2)

-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로 동법 폐지를 입법 예고(2008. 9. 2)한 상태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 정비
 - 특별회계는 예산 운용의 경직성, 예산 낭비, 비효율 등 초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폐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의 폐지를 의미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시설의 확충 및 대중 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부과
 - 교특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1994년에 설치 운영
 -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연 9조원)가 교특회계로 전입

■ 우리나라의 SOC 시설 현황

- 현재 교특회계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SOC 예산 부족에 따른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이 빈번히 발생,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부족하며 물류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감사원은 시공 중인 453개 도로 건설 사업의 사업 기간 변동 현황을 조사(2005. 9), 상당수 현장에서 공기 연장 발생(일반국도(176개) 공사 기간 평균 7.4년 연장)
 - 대한건설협회가 2008년 8월, 451개 건설 현장을 조사한 결과, 215개 현장(47.7%)이 예산 부족,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연장 또는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55.2%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물류비는 2000년 77조원(국제수송비 포함시 94조원)에서 2005년 101조원(131조원)으로 지속 상승,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원에서 2005년 23조원으로 지속 상승

- 우리나라 국가물류비의 GDP 비중은 2005년 12.5% 수준으로 미국 9.1%(2005년), 일본 8.2%(2003년)에 비해 높은 수준
- 우리나라 SOC 시설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
 - 도로는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은 1.47로 미국 3.78, 일본 5.35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국가별 km당 자동차 대수도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
 - 철도는 그리스·포르투갈·스웨덴·영국 등 국토계수가 유사한 4개 국과 비교할 때 이들 나라 평균의 약 40~50% 수준에 불과

■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시 우려되는 사항들

-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시 안정적 투자 재원 조달의 차질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투자 차질 우려
-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 여력은 매년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차질 우려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성장 지원을 위한 육상·해상·항공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 필요
 - 기획재정부는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신규로 5년간 50조원 투자 계획 보고(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9. 10)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연장의 필요성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기간인 2019년까지 연장 필요
-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대한 논란은 이론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처한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의해 결정해야 함.
-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교통 물류 강국에서는 SOC 확충을 위해 여전히 목적세·특별회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도로신탁기금을 1956년 이후, 일본은 도로정비특정재원을 1955년 이후, 독일은 「도로건설재정법」을 1960년 이후 지속 유지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

“저소득층·무주택자 주택 마련 지원에 주력”

9.19 대책 분석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에 중점, 구체적 재원 마련책 등에는 미흡 -

■ 9.19 대책의 발표 배경

- 현재 주택시장은 미분양 물량의 적체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건설업체가 공급 계획을 철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사업성 확보의 곤란과 사업 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부담 가중을 회피하려는 추세임.
- 주택시장의 안정 지속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급 위축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 균형 확보를 위한 연간 50만호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임.
 - 수요가 집중되어 왔던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2004년 이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 침체와 함께 소득 계층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 서민 가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저소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지원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징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물량 위주에 치우쳐 도심 내 임대주택의 부족과 소득 계층 간 주거 분리,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임.

■ 9.19 대책의 구체적 내용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시장 기능의 정상화 및 도심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는 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9.19 대책의 향후 보완 사항

- 정부가 향후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급 위축 및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서민들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계획과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주택시장에서 설득력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분양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전예약제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함.
- 기존의 해제 예정 GB 용지 이외의 추가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등 반대 여론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설득력 있는 대처 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계획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음.

9.19 대책의 구체적 내용

구분		구체적 내용
중장기 주택 공급	수도권	·향후 10년 간 연평균 30만호 지속적 공급 - 기존 도심지 내 60%, 도시 근교 및 외곽 40%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 - 절차 단축, 지구 지정 면적 완화 - 재건축재개발 절차 단축, 거래규제 개선, 소형 주택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제 완화 검토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 ·일정 규모(20~149호)의 단지형 다세대 도입(시설·건축 기준 완화) ·주상복합의 복합 용도 건설 허용, 분양가 가산비 추가 인정 등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 확대 ·오피스텔, 기숙사형 주택 등 대체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 근교 택지 우선 개발
	지방	·주택 수요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연평균 20만 호 공급 ·도시 내 주거 지역, 도시 인근 시가화 예정 용지, GB 조정 가능지 등을 활용한 공공 택지 개발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주택 공급	·2018년까지 150만호 공급(공공에서 직접 건설) - 중소형 저가 주택 70만호 -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 임대 20만호 - 장기 전세형 10만호 - 장기 임대 50만(국민임대 40만호, 영구임대 10만호)
	택지 확보	·수도권 100만호(도시 내 20만호, 도시 근교 30만호, 도시 외곽 50만호) ·지방 50만호(도시 인근 시가화 예정 용지, GB 조정 가능지 등 활용)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택지 개발~주택 건설 사업 기간 단축(3년→1년 6개월)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제정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 조기화(지구 지정일→주민공람 공고일) ·주민공람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한 투기 방지
	분양가 인하	·용적률 상향, 시공 과정 합리화, 보상 가격 산정 시점 조기화 및 감정 평가의 객관성 확보, 간선시설 부담 최적화
	입주자 부담 완화	·구입 자금 지원 확대(30년 장기 대출 도입)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수준별 차등임대료제 도입
	청약 관련 사전예약방식 도입	·공공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입주 시기, 분양가, 입지 등의 선택과 관련한 사전예약제 도입
	건설 비용 및 재원 조달	·국민주택기금 거치기간 추가 연장 ·재정 및 기금 등과 함께 다양한 조달 방안 마련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투자의 원칙 -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 한국 증시가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저평가돼, 지금이 주식 투자의 적기일 수도 -

■ 현재 한국 증시의 PER(주가이익비율) 수준

- 한국 증시가 전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임. 2009년 9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전세계 9개국 증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한국 코스피200 지수종목의 주가이익비율(PER)은 9.96으로 미국 S&P500(15.23), 일본 니케이225(15.52), 중국 상해종합지수(16.05) 등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줌. PER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 코스피200 종목의 PER는 지난해 말의 13.43과 비교해 3.47이 줄어들었음. 이는 중국(-32.75), 인도(-9.60), 홍콩(-5.63)에 이어 9개국 중 네 번째로 큰 감소폭임.

주요국 증시 PER 현황

(단위 : %)

국가	지수	2007년 말	2008. 9. 4	증감률
한국	KOSPI200	13.43	9.96	-3.47
미국	S&P500	16.85	15.23	-1.62
영국	FTSE 100	11.75	10.32	-1.42
독일	DAX30	12.07	11.19	-0.89
프랑스	CAC40	12.52	10.50	-2.02
일본	NIKKEI225	17.46	15.52	-1.93
홍콩	Hang Seng	19.95	12.32	-5.63
중국	상해종합	48.80	16.05	-32.75
인도	SENSEX	25.59	15.99	-9.60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 세계 금융시장 큰손들의 움직임

- 주식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전력회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그룹을 47억 달러(주당 26.50달러)에 사들임.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 10월 이후에만 8개의 기업을 인수하였음.

-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하기로 한 콘스텔레이션은 전력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경기를 별로 타지 않음. 콘스텔레이션은 파산 신청을 한 리먼브러더스와 파생 상품을 거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58%나 떨어짐.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폭락이었음.
- 버핏은 또한, 올해 3월 시카고의 부호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던 마몬홀딩스를 45억 달러에 사들였고, 4월에는 M&M 초콜릿으로 유명한 마스가 세계 최대 껌 업체인 리글리사를 인수하는 데 65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또한 골드만 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함.
- 중국 3대 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유대인 금융 자본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로스차일드은행 지분 20%를 22억 9,700만 위안(약 3,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음.
- 국내의 가치 투자 펀드들도 타 펀드들이 수익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음. 밸류자산운용은 올 들어 증시에서 이니시스·파트론·에버다임·나노트로닉스의 지분을 사들였음.

■ 남들하고 반대로 가라

- 주식시장에서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주가의 횡보시에도 폭락은 주기적으로 나타남.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사는 경우는 없음.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감기와 같이 빈번하게 나타남. 대부분의 폭락은 인간의 생존 욕구에 따른 과민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임.
- 주식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폭락은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임.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폭락은 적어도 국내 시장에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폭락은 제 자리를 찾게 마련. 투자의 원칙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임.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 회의 참여 현황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008. 9. 18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생산 구조 개선 자문회의 자문위원 참여 ■ 전문건설업 직발주 공사에 대한 원하도급 관리 개선 방안 및 직발주 공사에 대한 현장소장 투입 방식 개선 방안 등 자문
2008. 9. 19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규제개혁심의회 참석 ■ 납품단가 조정회의 의무제 도입,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 심의

■ 신규 연구과제 발령

과제명	주요 내용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 도입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 도입 추진시 사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의 제시 ■ 동 제도의 효과 및 제도 도입시 업계 영향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주요 대외 활동 추진 현황

- 9. 18(목), 한국산업안전공단과의 교류·협력 관련 간담회 개최
 - 연구원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건설산업의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등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 기타 연구원 활동

- 2009년 연구 과제 제안 실시
 - 제안 기간 : 9. 16 ~ 10. 10,
 - 제안 분야 : 건설, 주택·부동산 분야 관련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 대상 : 정부 부처, 건설 관련 유관기관, 건설업계, 건설 및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
 - 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02-3441-0815, 0896)
- “주택·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 추진
 - 일시 및 장소 : 2008. 10. 7(화) 14 : 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제 발표
 - 제1주제 : 최근 6개월 간의 주택·부동산 정책의 평가(규제 완화 실적을 중심으로)
 - 제2주제 :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 진단과 정상화 방안
 - 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02-3441-0701)

3D 산업에 대한 역발상

3D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뜻으로 좋지 못한 산업 이미지를 말할 때 사용된다. 3D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건설산업이다. 건설산업 이미지는 좋지 못하다. 건설산업이 발전하려면 하루 빨리 3D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3D가 반드시 나쁜 뜻만 갖고 있을까? 3D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에는 남다른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3D에는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생산 방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3D의 첫 단어인 ‘dirty(더럽다)’의 어원인 ‘dirt’는 인간 삶의 터전이고, 노력과 땀을 요구하는 흙을 의미한다. 둘째 단어인 ‘difficult(어렵다)’는 인간이 노력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일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dangerous(위험하다)’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이고, 이는 대부분 3D 산업에서 나온다. 건설산업은 주(住)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을 창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3D 산업이다. 흙을 대상으로 하여 노력으로 극복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하는 산업이 건설산업이다. 건설산업이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D 산업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3D의 정신을 제대로 살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3D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마련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기술과 정보를 중시하는 첨단산업이 발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거칠고도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3D 업종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진다. 3D 업종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이다.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가 3D 산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넘쳐 나는 청년 실업자를 해소하는 과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건설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넘쳐나고 있다.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해도 3D를 경시하는 풍조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3D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간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윤영선(연구위원-ysyoon@cerik.re.kr)